

與, 계엄 1년 앞 국힘 때리기 가속...“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국민의힘, 극우와 손잡고 민생 포기
2천-3천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종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한쪽은 극우랑 손잡는 극우 정당으로 아웃, 또 한쪽으로는 (국회)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민생포기 정당으로 아웃인 ‘더블 플레이(병살)’ 상황”이라며 “겨우 2천, 3천명씩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려고 장의 투쟁을 한다니, 저기가(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 커녕, 윤석

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잡기 이전에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반성도 엄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한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항소심에서라도, 고등법원이라도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내란 청산의 길”이라며 “민주당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부부, 튀르키예 국민 만찬 참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도 공백 해소...후속 지원 체계 마련

권향열, 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열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25일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전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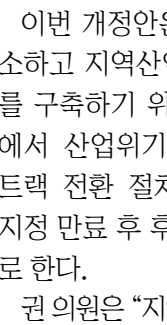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



차가 미비해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이후에는 필요한 후속지원 근거가 부재해 지역산업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대응의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 트랙 전환 절차 마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지역 산업이 위기를 맞는 순간 가

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속도”라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의 지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위기대응은 초기부터 마지막 회복 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정 절차의 ‘틈새’를 메우고, 후속지원의 ‘공백’도 해소해 지역산업의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일 광양시 철강산업의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5년 11월20일부터 2027년 11월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민형배, 베트남전 진실규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담화)실에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다.

민 의원은 지난 9월30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 침해 사건 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 침해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토론회가 베트남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베트남전 진실규

명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 “국가공무원 당직제 폐지 환영”

인사혁신처가 지난 24일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광주시는 25일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당직민원 응대 시스템인 ‘AI 당지기’를 도입, 행정혁신을 선도했다.

광주의 선도적인 행정 변화가 정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AI당지기’는 당직민원을 실시간 응대한 뒤 5개 자치구와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동 연계하거나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전체 당직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단순 민원을 ‘AI 당지기’가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간근무와 다음날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했다.

/기수희 기자

공무원,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

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도 포함됐다.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

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